



환경단체의 기후변화대책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부장

1. 기후변화를 보는 시각

1995년 IPCC 제2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때문에 1860년에 비해 0.3-0.6℃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지금에 비해 추가적으로 기온이 0.8-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기상연구소는 한반도에서 지난 75년 동안 평균기온이 1.1℃ 가량 증가하였으며 2060년경에는 현재보다 2℃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여 IPCC보고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과학적 논쟁은 계속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은 IPCC 제3차 평가보고서 초안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진정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과학자그룹, 환경단체, 언론이 환경문제를 과장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중차대한 지구환경위기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체제의 위기로 보고 있다. 환경연합은 기후변화문제의 본질을 지난 250여년간 진행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다 소비형 산업화가 배태한 지구적 환경위기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자원고갈,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군사분쟁 등을 유발하는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대안(Sustainable and Peaceful Energy Alternatives : SPEAs)을 현실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기후변화대책의 지구적 원칙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제2조)으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되 모든 국가에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을 원칙(제3조)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협약 조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협약을 지탱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공평성(Equity)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IPCC의 보고서는 지구생태계의 연간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은 분자량으로 140-170억톤 사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을 세계인구(1989년 기준) 52억명으로 나눠보면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7-3.3톤(0.74-0.9TC)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가능한 배출량의 2배가 넘는 연간 1인당 7톤(1.9TC)을 넘었다. 환경연합은 지속가능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2050년까지 각 국가가 1인당 0.9TC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각각의 국가들에게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을 규정해준다.

Annex I 국가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지속가능한 수준의 배출을 넘어선 한국을 비롯한 선진개발도상국들은 즉각적인 감축의 충격을 피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총량 감축을 시작하여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아직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머물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까지 배출량의 증가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상의 남북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것을 지렛대로 공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3. 교토의정서 평가

1) 성과

교토회의에서 Annex I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nnex I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5.2% 줄여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지만,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있는 조치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산물이며 지속불가능한 성장 방식에 대한 인류의 반성의 결과이다.

2) 한계와 문제점

온실가스 축적량을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하려면 배출량을 50-70%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IPCC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다면 전 세계는 2100년에 가서는 세계 기후가 섭씨 3도 상승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는 비가역적인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해도 기후변화를 방지하기는 어렵다.

온실가스의 2/3를 배출하는 1/5의 선진산업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무이행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지구적 배출 허용량(Global emission budget)에 도달하도록 선진산업국은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할 것이며,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탄소배출을 낮추는 경로를 따라야 한다. IPCC 제3차 보고서를 기초로 COP7에서 의무이행의 적절성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결국 인류사회가 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도약하는 경과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Annex I 국가들이 적절하지 못한 현행 이행의무조차 국내 조치 없이 달성할 수 있고 자국 내에서 위험한 온실가스 방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을 허용함으로써 선진국에게 지속가능성 수준을 넘어서는 배출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배출량 분배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결과 선진국은 현재의 배출을 기준으로 장래의 감축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것은 선진국의 배출권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토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입장

교토의정서에는 그 효력을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소위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이 조항들은 투명성, 책임성 및 검증성의 엄격한 규칙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진국의 배출량을 늘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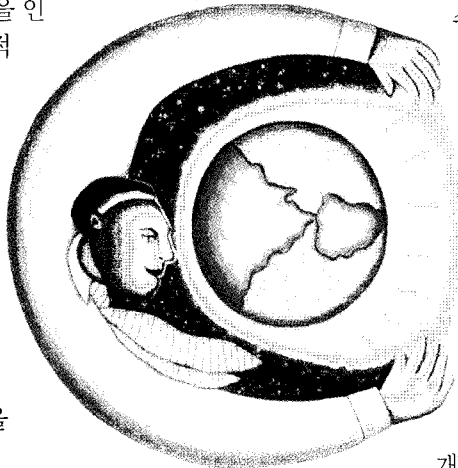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각국이 배출량의 감축과 더불어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신축성을 제고한다는 구실로 개발되었다. 배출권의 거래는 선진국이 자국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구소련연방 등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그 많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이 이 배출권을 구입한다면 2008년까지 1990년 수준의 7%를 감축하고도 6%를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공동이행 혹은 청정개발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지구적인 규모에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정작 배출량을 감소시키려 할 때는 한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만을 갖게 되어 개도국으로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배출권의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청정개발체제는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토메커니즘은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다면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이 적극적인 국내조치를 피하고 일인당 배출을 높게 허용하는 허점이 되어선 안 된다. 세 가지 신축성조치는 지속가능성과 공평성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1) 배출권거래와 공동이행

-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대로 선진국은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추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적 모니터 및 검증 체계, 국가적 등록과 보고 체계,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시행, 이행강제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이 신축성 조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만이 기후변화협약(4조5항)과 교토의 정서(2조1항)에 부합할 수 있다. 대규모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은 공동이행의 수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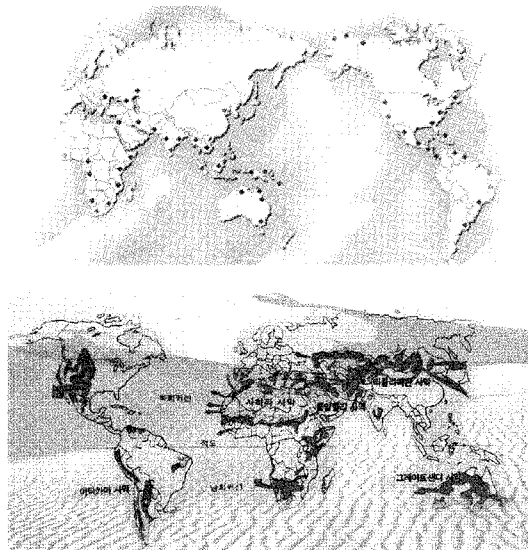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와 공공이행을 통한 배출저감의 획득과 거래는 국내조치의 보충적 역할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교토의 정서 이행 당사자들은 국내조치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해야 한다.

2) 청정개발체제(CDM)

- CD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도국들이 전지구적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CDM은 Annex I 국가의 국내조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DM의 사용에 양적인 정해져야 한다.

- CDM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CDM이 개도국을 돕고 기후변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기준, 원칙, 규칙, 방법론, 제도적 정비 등에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

- CDM 사업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환경적 영향이 큰 핵발전과 대규모 수력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청정석탄사업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5TC를 초과하였다. 개도국 평균 0.6TC의 4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선진산업국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따질 명분이 점차 약해져가고 있다. 한국 같은 선발개도국의 참여가 없으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압력도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연동된 에너지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대체로 유지할 전망을 제시하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지 의문이다.

2)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 치우쳐 매우 수동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회피할 방안 강구에 매달리는 인상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외형상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8년 4월에 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고 국무조

정실이 조율하는 '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를 수립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선 관련 부처를 보면 대개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자원정책과에서 업무의 일부로 기후변화협약을 담당하는 수준이고 외교통상부의 경우 다른 18개 국제환경조약과 별 차이 없이 기후변화협약을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협력과와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별다른 역할이 없다. 관련부처의 담당자도 순환근무제 원칙에 따라 자주 바뀐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이견 조정과 정책 종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기상학, 생태학, 농학, 해양학 분야는 걸음마 단계이다. 또한 범정부대책기구와 산업계, 소

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대응

1)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1인당 배출량 측면에서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non-Annex I 국가로서 OECD 회원국의 지위를 일정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1996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이 전세계의 1.7%, 세계 10위에 이르렀다.

IMF구제금융 시기에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미 에너지총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IMF이전 수준을 넘었다.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도 2000년 기준 2.53TC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비자,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범정부대책기구의 계획과 이행을 감시·평가·보완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이 산업계와 시민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고 있다.

-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구체화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은 나열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

외교 전략상 감축 목표를 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별, 세부과제별 감축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가장 주요한 에너지대책은 적절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알려진 원전을 1998년-2015년 기간 중 18기 신규로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이 없으며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 수요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어 끼어넣기 식 대책으로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이다. 더군다나 종합대책에 나열된 주요 온실가스 저감대책인 원전 증설, 소각로 증설,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등은 온실가스 감축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추진하던 계획이다.

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선발개도국으로 이루어진 '의무이행 그룹' 창설을 제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방지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압력을 계속 버티기 힘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대량배출 국가로서 책임을 회피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불공평한 배출실적에 입각하여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를 상당히 확보해 두었다. 선진국은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 없이도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IPCC의 예측대로 지구생태계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체제의 붕괴를 막고 지구 대기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선발개도국이 맡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은 의무적이고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면서 선진국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1998년 9월에 개최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역할과 전략 국제회의에서 선진국들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Annex I 외에 새로운 Annex 그룹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그룹에 참여할 대상은 선진사업국에 포함되

지 않지만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적인 평균을 넘어선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군은 다음의 의무를 분담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Annex I 국가와 차이를 둘 수 있다. 둘째, 총배출량의 감축을 시작하는 기준연도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합의해야 한다.

- 남북한협력단위의 구성 : 통일 이전이라도 EU와 같이 남북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어서 에너지협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여유를 갖게 될 것이며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재편과 에너지절약,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추진 :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정보통신분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 구조도 저에너지 산업구조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도 산업구조 개편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하는 에너지절약산업,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도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로키마운틴연구소는 원자력발전엔 투자하는 것보다 전력효율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7배 정도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에너지절약의 잠재력은 통상 전체수요의 30%가 넘는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공급의 보조적인 수단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의 관점에서 제도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보수적이었던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알더치셀의 에너지전망 시나리오에서도 21세기 중반이면 전체 에너지공급의 30~50%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풍력과 태양광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선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수요 중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에 1.03%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의 소각열 비중이 91.9%에 달해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해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이전해야 한다.

-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 일부 연관된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은 백지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성숙한 서유럽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수급의 권한이 큰 지방자치단체

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마치 한 국가에서 기후변화대책을 분야별로 수립하듯이 에너지 분야별로 언제까지 어떤 수단을 도입하여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1996년 11월 독일 남서부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 의회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보다 25%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기술적, 이론적, 현실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면에서 지역난방, 에너지효율 제고, 소수력, 열병합발전, 태양열·태양광발전 등의 수단을, 교통면에서 경전철, 대중교통, 철도, 자전거, 교통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구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회, 정치적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지방정치의 자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제21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시민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책

1) 국제연대 : 위기에 처한 기후변화방지 지회의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 세계의 284개 시민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를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대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개별 국가에서, 당사국총회 장소에서 미래 세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교토의정서가 지연 없이 비준되고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IPCC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적 배출허용량(Global Emission Budget)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이고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선진국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개도국의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지구 대기를 안정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정부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WTO에 대하여 전 세계 시민단체가 시애틀에서 자율적인 연대를 과시했듯이 지구온난화 방지보다는 각국의 개별이익 추구 때문에 목적과는 상당히 멀어진 기후변화협약을 정상

화하기 위해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세계 시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국내에선 연대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호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에 노력하고 있다.

2) 국내 활동 :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대안 추구

시민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너지절약에 모범을 창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역할도 할 것이다.

최근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은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시민연대'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하에 역량을 집중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인 에너지절약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시민 사회가 능동적이고 집중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기술적 요인의 영향이 큰 산업부문과는 달리 의식 개혁과 행태 변화가 중요한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

약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절약 시민연대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면 시민단체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에너지절약,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국내에서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대책을 모니터하고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변화대책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 CASA같은 시민단체처럼 현재의 기술과 제도만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실상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제시한 원자력발전 추진안을 수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문제, 핵폐기물처리문제, 입지문제, 비용증가문제 등 여러 이유로 부적합한 에너지원이며 막대한 비용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낮다. 더군다나 원자력발전 추진정책은 에너지절약이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투자할 자원을 선점·낭비하여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START

Welcome to Energy Information Center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38(대우B/D 3F) T. (02)679-6464 F. (02)2632-7566
 e-mail:w3master@energycenter.co.kr